



윤석열의 마약과의 전쟁
3~5면

간첩 수사 마녀사냥에 속지 말라
6~7면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국가의 뒤틀린 우선순위가 낳은
인도적 재앙 8면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
특별 호외

이재명 구속영장 철회하라

관련 기사 2면



오직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만 발행하는

노동자 연대 신문을 후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으로 <노동자 연대> 신문이 윤석열 퇴진 목소리를 더 널리 알리려는 노력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예금주 (주) 레프트미디어)



정기 후원 신청

이재명 구속영장 철회하라

2월 16일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를 반대해야 한다.

법무부가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2월 중에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듯하다.

검찰이 제기한 혐의는 두 가지이다. (1) 대장동 개발 당시 민간업자가 얻은 수익 4891억 원이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배임이라는 것이다. (2) 두산·네이버 등이 성남FC(축구단)에 준 후원금 133억 원이 해당 기업의 민원 처리를 도운 대가이므로 뇌물이라는 것이다.

이재명 개인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나 뇌물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검찰과 우파 언론들이 반년 넘게 대형 정치자금 부패 사건이라고 낙인 찍었음에도 두 건 모두 이재명 개인이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음을 뜻한다.

검찰 주장대로라면, 이재명은 대

장동 개발로는 성남시에게 손해를 끼쳤고, 성남FC 건으로는 성남시 재정에 보탬이 되는 상반된 행동을 했는데, 둘 다 똑같은 부패 범죄라는 것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사기업과 민관 합동 방식으로 공공 사업을 하는 것은 전면적인 신자유주의 민영화 방식은 아니지만, 초기 정부 자금 투자(단기적 재정 적자) 부담을 줄이고, 사기업에도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는 절충적인 방식이다. 이명박이 먼저 시행한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가 이런 원리의 제도다.

일반으로 말해, 민관합동 개발 방식이 노동자 등 서민에 이롭지는 않다. 하지만 애초에 민간에 수익이 가게 하려고 고안된 민관합동 방식에서 민간 개발업자가 이익을 많이 얻었으므로 형사범죄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억지스럽다.

게다가 대장동 100퍼센트 공공개

발을 막은 것은 당시 성남시의회 다수당이었던 국민의힘이었다.

검찰은 배임 액수를 늘리려고 성남시가 시민공원, 터널 등 기반 시설들을 제공받은 것을 성남시 수익에서 뺐다. 대장동 개발 수익에서 3700억원이 이 기반 시설들에 사용됐다. 게다가 시민공원은 대장동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 있다.

성남FC 건도 비슷하다. 지난 십수년간 지방자치단체가 조세 수입을 늘리려고 “기업도시” 운운하며 대기업 본사나 투자를 유치하고 혜택을 주는 것은 비일비재했다.

윤석열 자신도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운운하며 규제 완화, 법인세 특혜를 제공하며 대기업들의 투자 약속을 받아내고 있다.

이런 신자유주의 정책들은 서민의 삶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것이 형사 범죄가 된다는 것은 또 다른 얘기이다.

구속도 터무니없다. 이재명은 현직 국회의원이자 169석을 가진 원내 과반수 정당의 대표다. 이재명 자신이 밝혔듯이 도주의 우려가 없는 것이다.

범죄 혐의의 입증, 도주 우려, 증거 인멸 가능성이 통상 법원이 따지는 구속영장 발부 요건이다. 그러나 이번 경우 해당 사항이 없다.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현행범도 아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사법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검찰권 남용인 것이다.

검찰이 국회 다수당의 대표에게조차 이렇진대 보통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해 뒀하겠는가.

따라서 검찰의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를 비판해야 하고, 체포동의안에도 반대해야 한다. 그를 향한 국가 권력 남용과 증거도 없는 괴롭힘은 노동자 운동과 좌파 일반을 향한 칼날이 될 수도 있다.

정의당은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찬성하지 말라

정의당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도 하기 전인 2월 13일, 다시 말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도 되기 전에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리분별을 못하는 이런 태도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정의당이 윤석열 정부와 검찰 편을 드는 것을 뜻한다.

아니나다를까,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월 14일 한 라디오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검찰과 권력이 ... [정적 제거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없는 죄를 만들어서 증거를 조작하거나 이

럴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지켜봐야 되는 것이죠.”(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윤석열은 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2013년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의 담당 검사인 이시원을 임명했다. 그런데도 과거지사로 치부할 수 있을까?

검찰은 대장동 문제에서 박영수 등 검찰 고위직 출신자들은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검찰이 요즘 압수수색을 남발하는 논리대로라면, 수사 회피 자체가 증거 인멸 방조 아닐까?

정의당은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입장이 진보 계열 대중의 반발을 사는 등 역풍이 일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가 정의당의 일관된 당론이라는 군색한 핑계를 댄다. 아니면, 구체적 상황에서 추상적 사고를 하는 것이 특기인가?

진정한 쟁점은 이재명 구속영장-체포동의안의 정당성이다. 이 점은 ‘이재명 체포동의안 철회하라’ 기사에서 지적했다.

정의당이 놓치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확정 판결 전까지 무죄로 추정한다

는 것은 형사사법절차에서 구속 수사를 예외로 하고,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함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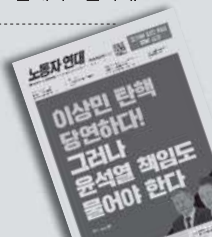
그러나 검찰은 부족한 구속영장 청구의 명분을 채우려고 이재명 측근 정성호가 정진상 등을 면회한 내용을 공개하며 “회유” 운운하는 언론플레이를 했다.

이처럼,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정의당의 이재명 체포동의안 찬성은 국회의원 특권 반대가 아니라 검찰의 권력 남용 특권을 존중하고 윤석열을 편드는 것이다. 정의당은 빨리 정신을 차리기를 바란다.

wspaper.org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 우크라이나 전쟁 1년 — 확전으로 가나?
- ★ 50억 특검 요구는 검찰 불신 정서를 반영한다
- ★ 정의당처럼 김건희 특검 요구를 반대해야 할까?
- ★ 프랑스 연금 개혁 반대 투쟁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구독하세요

2월 22일(수) 온라인 토론회

참가 신청 ▶



핵무기와 한반도 — 윤석열의 핵무장론, 북핵, 주변국

이태원 참사의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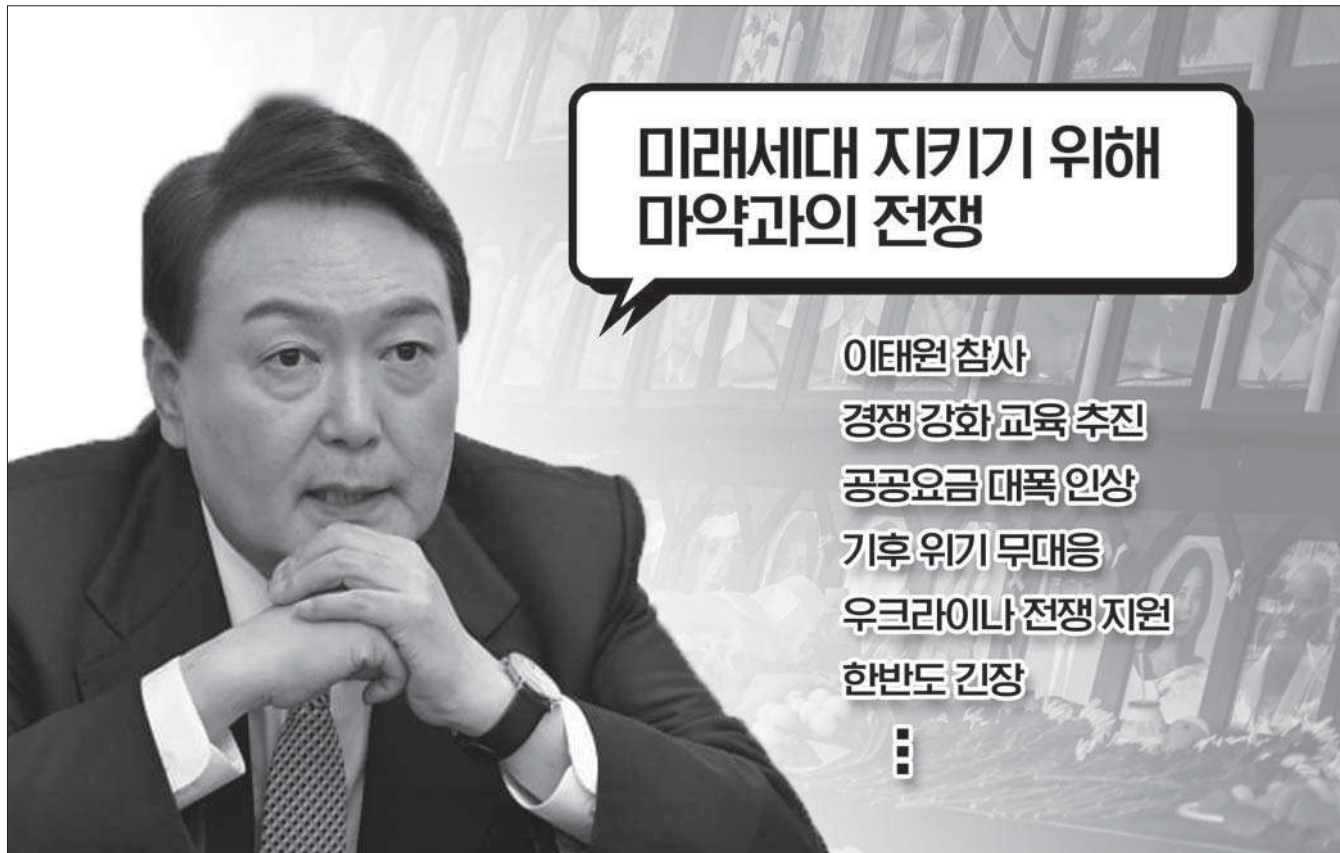
윤석열 정부 마약과의 전쟁, 성공할 수 있을까?

장호중 의사, <노동자 연대> 신문 기자

윤석열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 단속과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 한동훈은 “어린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때 ‘혹시 마약을 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나”하며 “지금부터 전쟁하듯이 막으면 막을 수 있다”고 자신하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마약 범죄 관련 기사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유명 배우인 유아인 씨가 프로포폴과 대마 등을 사용한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은 과연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평범한 사람들, 특히 청소년과 청년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만 낳을 공산이 크다.



마약 사용이 급증했다는 과장

윤석열 정부는 마약 사용자가 급증했다고 주장한다. 마약류사범 수가 2017년 1만 4123명에서 2021년 1만 6153명으로 2000여 명 늘었다는 게 근거다. 검찰이 발표한 '마약류 범죄백서'에 실린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통계가 마약 사용자 증가를 보여 주지는 못한다. 마약사범 수는 수사의 성과에 따라 오르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마약류사범도 급증했다기보다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마약 사용 실태를 정확히 보여주는 통계는 없다. 그나마 지난해부터 식약처가 하수에 포함된 마약류 성분을 측정해 발표하고 있는 것을 참고할 수는 있는데, 이 조사에서도 마약류 사용량이 조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긴 한다. 그러나 같은 통계를 작성하는 호주나 유럽연합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치임을 확인할 수 있다.

대마초, 양귀비도 마약 범죄?

정부가 마약 범죄라고 부르기 부적절한 것들까지 모두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도 문제다. 대마초가 대표적인데,

그러나 대마초를 마약으로 분류하는

것은 무리다. 네덜란드에서는 1970년대부터 대마초를 사용하거나 소량 소지하는 것을 처벌하지 않았다. 등록된 '커피숍'에서는 판매도 허용했다. 다만 생산을 허용하지는 않았는데, 국제마약통제위원회는 이런 조치를 비범죄화라고 분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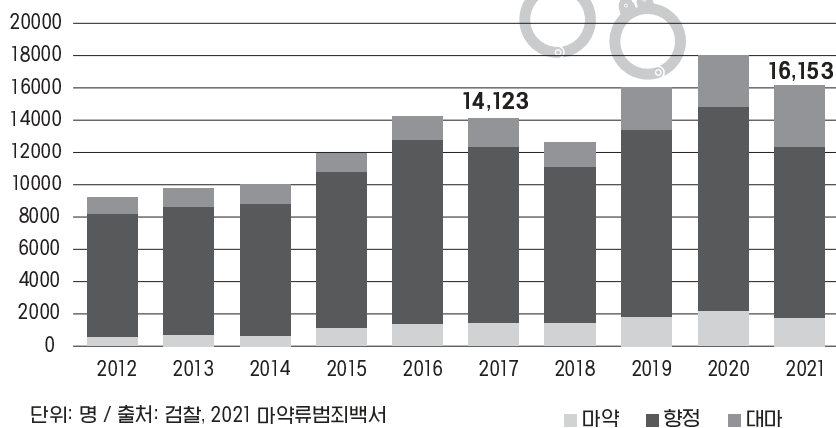
캐나다에서는 2018년에 대마초 생산과 유통을 모두 허용했다. 합법화한 것이다. 우루과이와 미국 내 여러 주에서도 대마초가 합법화됐다.

대마초는 사람들이 충분히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물질이고 합법화돼야 한다.

마약 범죄라고 부르기엔 부적절한 또 다른 경우는 양귀비 재배다. 앞서 본 마약류사범 통계 중 1000명 이상은 관상용이나 가정 상비약, 가축 치료용으로 재배한 양귀비를 단속한 결과다. 이런 것을 마약류 범죄에 포함시키는 것은 터무니없다.

그런데 대마초와 양귀비 재배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나면 마약류사범 증가세는 더욱 완만하다. 대마초나 양귀비 재배처럼 마약 범죄로 분류하기 부적절한 것들을 포함해서 마약 사용 증가를 과장하고 있는 것이다.

마약류사범 수 추이



용어설명

마약

마약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 상당히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데, 흔히 악마나 마귀의 마(魔)자를 먼저 떠올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저리다', '마비되다' 하는 뜻의 마(麻)자를 쓴다. 마취, 마라탕의 마와 같은 뜻이다. 본래 뜻과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알면서도 국가 기구들이 이 단어를 고수하는 이유는 마약에 대한 두려움을 조장하기에 유리하다고 여기기 때문인 듯하다. 이들은 마약을 사용하면 (마귀에 씌 것처럼) 통제 불능의 상태에 빠져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친다고 주장한다. 영어권에서는 약물 남용(drug abuse)이라고

한다. 드럭(drugs)은 약(medicines)과 구별되지만 남용이라는 말을 덧붙여 그 약들이 치료제로서 활용도가 있지만 본래 목적과 달리 사용된다는 뜻을 담고 있다. 물론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마약들(헤로인, 코카인, 필로폰 등)은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의료용으로 광범하게 사용됐으므로 남용이라는 말도 역사적·사회적 개념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유엔 등에서는 좀 더 중립적인 용어로 정신에 작용하는 물질, '향정신성 물질'(Psychoactive substances)이라고도 쓴다. 여기에는 술과 담배도 포함된다.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 중 헤로인과 코카인 같은 마약은 국내에서는 그 사용량이 매우 적은 편이다. 헤로인의 경우 2019년에는 압수량이 0일 정도로 드물다. 코카인의 경우도 앞서 하수 검사에서 본 것처럼 호주나 유럽 같은 지역과 비교하면 매우 적다.

펜타닐 같은 합성마약은 원래 말기 암 환자 등을 위한 초강력 진통제로 개발된 것이다. 이런 약들 중 일부는 무분별한 처방이 문제가 됐다. 미국에서는 최근 불법 펜타닐 중독 사망이 크게 늘었다. 2015~2021년 6년 동안 21만 명이 과다복용으로 사망했는데 이는 미국에서 2000년대 초에 시작된 마약성 진통제 과잉 처방과 연관돼 있다.

제약회사 퍼듀 파마는 마약성 진통제 옥시코틴의 독성을 과소평가했고, 정부는 그것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 규제 당국은 제약회사들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통증 관리 매뉴얼을 개발했고 의사들이 어지간하면 '심각한 통증'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보험업계는 진료시간 단축을 압박해 의사들이 강한 진통제부터 처방하도록 내몰았다.

나중에 옥시코틴의 위험성이 알려지며 판매가 중단됐지만, 이는 마약성 진통제에 익숙해진 사람들을 불법 약물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최근의 불법 펜타닐 중독 사망 증가는 이윤 중심의 미국 의료시스템이 만들어낸 비극이라고 할 수 있다.

펜타닐

마약류의 또 다른 범주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필로폰과 그 유사물질인 암페타민이 대표적이고, 항우울제 등 정신과에서 사용하는 약들과 프로포폴도 포함된다.

필로폰은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마약이다. 압수된 마약의 80퍼센트를 차지한다. 필로폰은 신체적 금단 증상은 상당히 나중에 나타나지만 집중력과 신체 감각을 극도로 끌어올려 줘 사용경험 자체가 강렬한 재사용 유혹이 된다.

마약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아편	필로폰	대마초
모르핀	LSD	해시시 등
헤로인	바르비탈류	
코카인	벤조디아제핀류	
펜타닐 등	케타민 등	

한국의 마약류 분류

암페타민은 필로폰과 화학적으로 매우 비슷하지만 효과가 조금 약하다. 미국에서 주의가 산만한 아이들(ADHD)에게 처방되기도 한다. 필로폰과 마찬가지로 집중력을 향상시켜 주기 때문이다. 물론 적은 양으로 효과가 오래 지속되도록 알약 형태로 만들어 처방한다.

이런 현실은 필로폰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암페타민류 약품을 활용할 여지가 있고, 그러려면 주의 깊은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마약과 중독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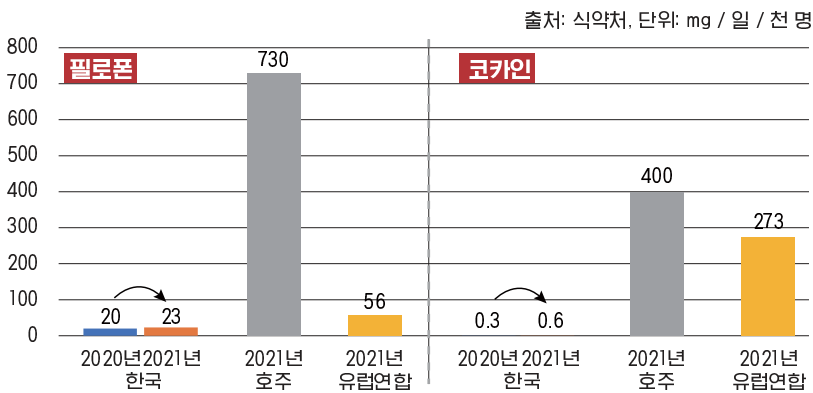
마약의 문제점으로 흔히 중독성이 지적된다. 중독성은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핵심 논거이기도 하다. 헤로인, 코카인, 향정신성의약품들에는 실제로 중독성이 있다. 그러나 중독성과 그 위험은 과장돼 있다.

2007년 영국의 권위 있는 의학 저널 <랜싯>에 실린 한 논문은 주목할 만한 지적을 한다. 논문 저자들은 약물의 신체적 유해성, 의존성, 사회적 유해성에 관해 수십 명의 마약 전문가들에게 점수를 매기도록 했는데, 흔히 중독성을 뜻하는 의존성에서 담배를 능가하는 것은 헤로인과 코카인뿐이었다. 총평가에서도 술과 담배보다 더 해로운 약물은 소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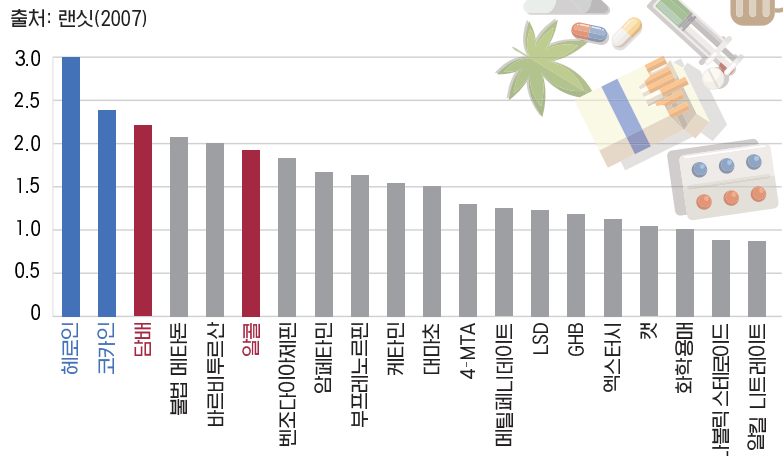
물론 마약의 중독성은 가벼이 여길 문제는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우 심각한 중독성을 경험한다. 약을 끊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워지고 끊으려면 도움이 필요하다. 다행히 금단 증상을 완화해 주는 약도 있고, 일부 마약은 치료를 잘 받으면 1년 안에 신체적 의존을 해결할 수 있다. 처벌이 아니라 치료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

마약 사용 급증? 하수에서 검출된 마약류 조사



약물별 의존도 평가



스스로 마약 사용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심리적 의존

또 마약 사용자들 대부분에게 훨씬 큰 문제는 심리적 의존이다. 심리적 의존은 여러 요인들이 복잡하게 작용한 결과여서 사람마다 차이가 크고, 사회로부터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벗어나기가 어렵다. 금연 시도를 여러 차례 해본 사람은 알 것이다. 따라서 공포를 부추기고 처벌하는 방식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뒤에서 좀 더 다루겠다.

마약 반대론자들은 마약에 중독되면 범죄를 저지른다는 논리를 펴기도 한

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 없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2012년 연구보고서는 “마약류사범이 다른 범죄도 많이 저지른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한다.《중독 인생 — 한국에서 마약하는 사람들》, 북콤마) 전체 살인범죄의 절반 가까이는 음주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술이 각종 강력 범죄를 유발한다는 증거는 많지만, 그렇다고 음주를 금지하거나 처벌하지는 않는다.

요컨대 마약의 중독성은 심각하게 다뤄야 할 문제이지만 그것을 이유로 마약 사용자를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고 무엇보다 효과가 없다.

마약과의 전쟁, 무엇을 위해 누구와 싸우나?

정부는 1월 27일 각 부처 차관급이 참가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해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자신이 보통 사람들의 고통을 가중시켜 항우울제에 의존해야 할 상황을 만들고 있다.

어쨌든 이런 명분을 앞세워 추진된

마약과의 전쟁은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성공한 적이 없다. 미국 등 선진국 정부들이 국내외에서 벌인 마약과의 전쟁은 대개 다른 경쟁 마약상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으로 끝났다. 권력과 결탁한 진정한 마약왕들은 처벌받지도 않았다.

마약과의 전쟁은 애당초 마약을 없애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 미국 대통령

닉슨은 1960년대 공민권 운동과 흑인 운동을 공격하려고 ‘마약과의 전쟁’을 내세웠다. 1989년 조지 부시가 라틴아메리카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을 때도 그 목적은 동유럽 붕괴 이후 군비 지출을 유지할 명분을 만들고 애국심을 고취시키려는 것이었을 뿐이다.

한국에서도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

▶ 5면으로 이어짐

▶ 4면에서 이어짐

절에 대대적인 마약 근절 캠페인이 벌어진 바 있다. 사회 분위기를 경색시키고 경찰력 활용을 정당화하기 위한 캠페인이었다. 박정희의 경우 유신헌법 제정을 앞두고 대마초 파동을 터뜨렸다. 전두환은 쿠데타로 집권한 후 히로뽕 사건을 터뜨렸고 정권 위기 상황에서 마약 단속을 이용했다.

또 마약과의 전쟁은 사람들 사이에 적자를 심고, 함정 수사를 하고, 내부자 제보 획득을 명분으로 가혹한 심문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됐다. 이런 수사 방법은 정치적 반대자들에게도 자주 사용됐다.

마약과의 전쟁이 거듭 추진됐지만 마약 문제가 줄기는커녕 대마초와 필로폰 모두 사용량이 늘었다. 새로운 마약도 많이 생겼다.

경찰과 검찰은 마약을 근절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 마약 사용자들을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나마 실적을 채우려고 내부 고발에 의존한다. 그러다 보니 체포된 판매자는 구매자를 고발해 감형받고, 정작 구매자는 제공할 정보가 없어 실형을 받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진다. 마약왕들은 판매망 중 실적이 될 만한 선을 한두 개 제공하고 감형을 받는다. 극소수의 부자들은 마약을 구입하고 사용하고 치료받는 모든 과정에서 별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이게 현실이다.



마약 사용의 원인

경찰과 검찰, 심지어 군대를 동원해도 마약을 근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마약을 사용하는 이유가 현실의 고통에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사람들을 등골이 휘도록 쥐어짤다. 미국에서는 건설노동자가 마약성 진통제 과다 복용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평균보다 6배나 크다.

실업이나 빈곤은 정신적 고통을 낳는다. 무한 경쟁과 자존감 파괴, 지긋지긋한 일상과 무료함은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창의적 에너지를 고갈시킨다. 오늘날 항우울제 처방 통계를 보면 마약류 통계는 우스워 보이기까지 한다.

실업자나 취약계층만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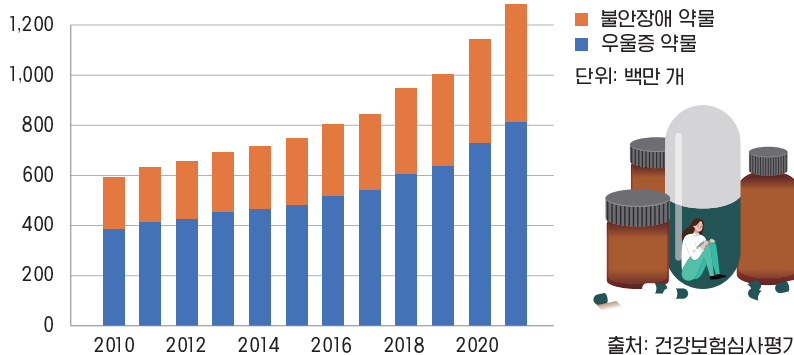
의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 자기 노동의 통제권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해야 한다. 마르크스는 그로부터 생겨나는 효과를 소외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말을 조금만 인용해 보겠다.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에서 스스로를 긍정하지 못하고 부정하며, 만족감이 아니라 불만족감을 느끼며, 육체적·정신적 에너지를 자유롭게 계발하지 못하고 자기 몸에 굴욕감을 느끼고 마음에 큰 상처를 받는다.”

이런 사회에서는 설사 그것이 몸과 정신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일지라도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것들에 사람들이 이끌리게 된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계속되는 한 마약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물론 마약은 소외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은 못한다. 그럼에도 마약의 부작용이 크더라도 자본주의가 가하는 압박과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에, 사람들은 도피처로서 마약에 계속 기대는 것이다.

정신적 고통의 증가를 보여 주는 항우울제 사용 추이



마약을 범죄로 다뤄선 안 되는 이유

이런 상황에서 마약 사용을 범죄화하고 처벌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마약 사용자들은 사회적 낙인이 찍히고 직업 선택과 복지 혜택에서도 차별을 받는데 이는 체제의 희생자들을 더한층의 고통으로 내몰 뿐이다.

치료도 못 받고 감옥에 갇힌 마약 사용자들은 심한 고통을 겪을 뿐 아니라 그곳에서 새로운 마약 거래처를 만나게 된다. 정부는 마약사범이 다른 제조자들에게 마약을 판매할 우려가 있다며 마약사범들을 한 곳에 수감한다. 이런 상태에서 사회에 복귀했을 때 낙인이 찍혀 직업도 복지 혜택도 없다면 그들에게 선택지가 뭐가 있을까?

중독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처벌

이 아니라 치료다. 그러나 마약 사용을 범죄로 취급하는 상황에서는 치료 지원이 제대로 될 수 없다. 예산 책정도 안 되고 누구나 기피하는 일이 된다. 현재 한국에서 마약 사용자가 언제든 찾아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은 사실상 두 곳뿐이고, 개인이 엄청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국가가 마약 사용자와 단순 소지자를 처벌하는 것에 반대하고 치료를 지원하라고 주장해야 한다. 마약 사용을 처벌하는 것은 문제를 음성화해 오히려 악화시킬 뿐이다. 대안을 위한 논의도 차단한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州)는 이번 달부터 헤로인, 코카인, 필로폰 등을 단순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처벌하

지 않는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주정부는 “물질 오남용은 공중 보건 문제이지 형사 사법 문제가 아니다” 하고 그 이유를 밝혔다.

처벌이 아니라 치료

이는 분명히 진일보한 정책이다. 그러나 몇 가지 조처들이 더 필요하다. 마약 사용자 보호 조치가 그런 것이다. 마약 사용으로 나타나는 문제 중에는 마약에 섞인 불순물이나 위생과 관련된 것들이 많다. 필로폰 사용자의 치아 훼손이나 주사기 재사용에 따른 질병 감염이 그런 사례다. 그래서 일부 나라에서는 주사기를 무료로 교환해 주고 안전주사실을 설치해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하기도 한다. 약물의 순도 검사를 해

주기도 한다.

이에 더해 정부가 마약의 생산과 유통에 관한 안전 규제를 해야 한다. 그러면 비록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피해를 줄이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반면, 국가의 마약 단속은 진정한 범죄자들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을 처벌하고, 그들을 희생양 삼아 억압을 정당화하는 수단일 뿐이다.

사람들이 약물에 희생되는 것을 근절하려면 사회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이윤 축적 경쟁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를 위해 운영되는 사회에서만 어떤 약물들은 영영 필요 없게 될 것이고, 약물을 인간에게 유용하게 사용할 가능성도 확대될 것이다.

이 기사는 2월 15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QR코드)의 발제문이다.



‘간첩수사’ 마녀사냥에 속지 말라

북한 국가에 비판적이면서도 친북 활동가 탄압을 반대할 수 있다

북한 국가에 대해 비판적이면 탄압 받는 친북 활동가를 방어할 수 없는가? 북한 국가에 대해 비판적이면서도 친북 활동가 탄압을 반대할 수 있고 또 마땅히 반대해야 한다.

먼저, 남한의 친북 활동가와 북한 지배 관료를 예리하게 구분해야 한다. 전자가 후자의 이데올로기를 운동의 신념으로 채택했다 해서 후자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같은 이데올로기가 지배 이데올로기로도, 저항 이데올로기로도 채택되는 것은 드물지 않다. 가령 이슬람주의도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곳에서는 지배자들의 지배 이데올로기이지만, 이집트에서는 (무슬림형제단에 의해) 서방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이데올로기로 채택되기도 한다.

어떤 사상이든 그것이 수용되는 집단의 사회적 기반을 봐야 하는 것이다. 북한 관료는 주민을 억압하고 노동자를 착취하는 지배계급이지만, 남한의 친북 활동가는 피착취·피억압자 운동의 일부이다.

국정원은 창원·제주·진주 등지의 ‘oo 지하조직’ 성원들이 한미연합훈련이나 미국산 첨단무기 도입 반대 활동을 한 것을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그 활동가들이 우리 운동의 일부임을 보여 준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점이다.

다른 사람의 사상이 내가 동의하지 않는 사상일지라도 그 사상을 이유로 그가 국가 탄압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핵심인 사상 표현의 자유의 기본이다.

윤석열 정부는 창원 등지의 활동가들이 북한 당국자와 접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당국자와의 접촉이 법으로 처벌받을 일이라면, 주류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의 북한 방문과 접촉은 처벌받지 않는 이중 잣대야말로 실질적 문제다. 보안법은 반체제 활동가들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이런 점은 보안법 적용의 진정한 목적이 다른 데 있음을 보여 준다. 윤석열



윤석열 정부는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위기 고조에 대응해 공안 탄압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떠들썩하게 “간첩 사건”을 부각시키며 대중에게 위기감과 공포심을 부추기는 진정한 목적은 반체제주의 운동을 분열시키고 위축시키려는 것이다. 물론 노동운동의 분열과 고립화도 또 다른 목적이다.

예를 들어, 1998년 7월 김대중 정부는 ‘영남위원회’ 사건을 터트려 울산지역 노동·사회운동 단체 활동가 16명을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로 구속했다. 그 사건은 “IMF 위기” 상황에서 노동자 투쟁(터뜨린 시점에서 당면하게는 현대차 울산공장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반대 투쟁)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노린 것이었다.

그러나 국정원에 협조하던 김영환(친북 좌파에서 전향해 나중에 뉴라이트가 된 인물)의 일방적 진술만을 증거로 사건이 기획됐고, 법원조차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에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2006년 ‘일심회’ 사건의 맥락과 목적도 본질적으로 유사했다. 북한 1차 핵 실험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자, 노무현 정부는 당시 평택 미군기지 반대 운동과 한미FTA 반대 운동에 적극적이었던 민주노동당의 일부 활동가들을 ‘북의 지령을 받는 간첩들’이라며 구속했다.

이들에 대한 방어 문제를 놓고 민주노동당은 극심한 내홍을 겪은 끝에 분당했다. 민주노동당의 PD경향(당시에 ‘평등파’라고 불렸다)은 ‘일심회’ 관련자들을 당에서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가 보안법 칼을 꺼내든 것도 오늘날 심각한 경제 위기가 강화하는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불안정 고조와 관계있다(관련 기사: 본지 450호 “간첩단” 몰이 — 윤석열의 자체 핵무장 주장과 짝을 이루는 것).

윤석열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한·미·일 군사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정치적 반대자들을 단속해 이런 위기 상황에 대응하려고 한다.

이 점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사수나 개악 추진을 위한 여론 형성을 최근 보안법 공격의 목적으로 보는 것은 (부분적 진실이긴 하지만) 협소한 시각이다.

국정원이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다. 국정원이 경찰 수사(특히 전문성과 경험)를 못 미더워 해, 자기네가 경찰을 지휘·감독하고 싶어서다. 그런데 이는 문제의 증대성에 비춰 국정원 윗선(대통령실)의 재가를 받은 일일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가 ‘친북’, ‘간첩’, ‘이적’을 부각시키는 목적은 한반도의 국가가 지정학적으로 대결하는 상황에서 반체제 국주의 운동과 노동운동을 분열시키고 마비시키는 것이다.

“친북적 일탈 행위”는 처벌받아야 하는 범죄인가?

윤석열 정부가 보안법 공격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좌파는 보안법 위반 혐의자의 특정 실천에 대한 방어는 유보하는 주장을 한다.

정종권 <레디앙> 편집국장(이하 직함·존칭 생략)은 윤석열 정부의 공안 수사와 민주노총 압수수색을 비판한다.

그는 북한 비판을 “반북반공, 반통일, 보수에 투항하는 것으로 치부하는 관성과 관습”이 진보세력 내에서 심각하고 “친북적 일탈 행위에 면죄부를 부여”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그는 “북한 공작원과 연계를 맺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등” “중대한 실정법 위반이 있다고 한다면 법적 처벌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레디앙> 1월 21일자. 이하 정종권 인용은 모두 이 글이 출처다.)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이하 직함·존칭 생략)도 자신의 SNS에 “간첩 행위” 처벌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형법의 간첩죄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있으므로 국가보안법은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종권·김창인에 따르면, 북한 사담과의 ‘단순 접촉’은 문제가 안 되지만

북한 정권과 연계를 맺는 “간첩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

그러나 사상의 자유는 곧 표현의 자유이기도 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북한 국가를 지지하는 활동가의 일부는 북한 관료와 연계를 맺는 것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을 일관된 논리의 귀결로 여길 수 있다.

그로서는 자신의 사상을 일관되게 실천으로 옮기는 셈이다. 비록 정종권에게는 이런 행위가 “일탈 행위”로 보일지라도 말이다.

그러나 최근에 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활동가들은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평화적인 수단으로 자신의 정치를 실천했다.

공안 당국은 그러한 활동가들의 단순한 북한 관료 접촉을 크게 부풀려 왔다. 가령 2008년 초 민주노동당 분당 사태 때 논란이 됐던 ‘일심회’ 사건에서도 두 민주노동당 활동가가 북한 관료에게 전달했다는 정보는 대단한 ‘국가 기밀’이 아니라, 인터넷이나 언론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폭력의 구체적 실행 계획이나 능력 등 그 실질성이 입증되지도 않은 상황



국가보안법은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악법

에서 평화적인 정치 활동을 탄압하는 것은 사상 표현의 자유 자체를 억압하는 것이다.

물론 북한 관료를 남한 좌파가 연대할 대상으로 보는 것은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보면 정치적 오류다.

그러나 정치적 오류 여부를 둘러싸고 운동 내에서는 토론과 논쟁의 여지가 있다.

국가가 강제력과 형사 법률로 재갈을 물리면 토론과 논쟁이 불가능해진다.

보안법 같은 사상 표현 억압 장치의 기능이 바로 이것, 즉 정치적 토론과 논쟁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다.

운동 내에서 토론과 논쟁을 하며 실천에서 옳고 그름을 따져 볼 문제가 지배자들의 탄압으로 교정될 수는 없다. 탄압은 자유로운 토론과 논쟁, 실천 속에서의 검증은 가로막을 뿐이다.

북한 지배자들은 미·중 간의 제국주의 경쟁이 가하는 이러한 압력에 핵과 미사일 강화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관련 기사: 본지 449호 ‘한반도 긴장은 북핵 때문인가?’)

민족 해방 운동가들은 북한 핵무기의 모순, 즉 민족 해방 운동의 수단이 될 수 없지만 북한 정부가 제국주의의 압력에 저항하는 수단은 되는 것에 대해 침묵하는 수밖에 없다. 그들 사상의 모순 때문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그들을 비판하는 것은 제국주의가 훨씬 더 큰, 본질적인 문제라는 점을 놓치는 것이다.

본질적인 문제에서 비롯한 미·일의 대북·대중 압박과, 윤석열 정부의 미·일과의 군사 동맹 강화에 맞서는 것이 남한에서 활동하는 좌파가 반제국주의 운동을 실천으로 구현하는 것일 것이다.

북한 사회의 진정한 성격

북한은 마르크스가 말한 사회주의와 하등 닮은 데가 없다. 북한 고위 관료의 자녀들은 해외에서 호화롭게 유학 생활을 한다. 반면 만연한 생필품 부족 때문에 대다수 주민들이 헐벗고 굶주리는데도, 북한 국가는 미사일과 핵무기를 만들어야 한다.

불평등과, 대중의 필요를 충족시켜주지 않는 체제의 우선순위는 남한 사회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마르크스는 사회주의를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으로 정의했다. 그러나 북한에서 그런 일은 없었다. 1945년 8월 일제의 패망 이후 그저 소련군 탱크가 들어와 그 지역을 점령하고 소련 사회와 본질적으로 유사한 사회를 건설했을 뿐이다.

흔히 국유화와 사회주의를 동일시하지만, 북한 국가를 통제한 것은 노동계급이 아니라, 노동계급을 억압하고 국가를 통해 착취하는 국가 관료였다.

북한 관료의 우선순위를 추동한 것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남한과의 군사적 경쟁 압력이었다.

이런 경쟁적 자본축적의 압박 하에서 북한 주민들의 필요는 완전히 희생됐다. 관료는 대중의 불만을 억눌러야 했기에,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도, 노동조합 권리도 허용하지 않았다.

이처럼 북한은 사회주의 사회가 아니라 남한과 꼭 마찬가지로 자본 축적 논리에 지배당하고, 착취와 억압에 토대를 둔 자본주의의 변형태이다. 서방 사회가 시장 자본주의 사회라면, 이런 사회는 관료적 국가자본주의 사회이다.

<참고 자료>

《[개정증보판] 북한은 어떤 사회인가? - 북한 체제에 대한 고전 마르크스주의의 비판》, 김하영, 2010, 다함께

‘일심회 마녀사냥과 국가보안법’, 민주노동당 의견그룹 다함께, 2008

‘한반도 긴장은 북핵 때문인가?’, 김영익, <노동자 연대> 449호

북한 핵무기의 모순, 민족 해방 운동의 모순

정종권 편집국장(이하 직함·존칭 생략)은 남한의 진보세력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등의 문제에 대해 별로 반응하지 않고 “침묵하거나 우회한다”고 지적한다. 미국·일본·중국의 행위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하면서 왜 북한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우리가 보기에 북한의 핵무기는 북한 관료의 처지에서는 미국에 맞서 자신의 생존을 지키는 수단이 될지 몰라도, 같은 민족의 노동자·민중을 희생시킬 수 있는 대량살상무기이므로 민족 해방 투쟁의 수단은 될 수 없다.

그래서 북한 핵무기는 남한에서 대중적인 평화 운동을 일으키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쳐 왔다. 북한 핵을 놓고 남한 평화 운동은 이미 10여 년 전에 분열했다.

동시에, 오늘날 북핵 문제는 미·중

간 제국주의적 갈등이라는 맥락 속에 자리매김해야 한다. 미·중 간의 제국주의적 경쟁은 세계를 더 위협하게 만드는 한편 한반도 정치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과 이에 대한 중국의 도전이 맞물리면서 동아시아와 한반도 주변 지역의 군사적 긴장은 전례없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대중국 포위를 위해 동맹국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군사력을 전진 배치해 왔다.

미국의 이런 전략에 조응해 일본은 선제 공격 능력을 갖추는 등 공공연히 무장력을 강화해 왔다.

윤석열 정부도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놓치지 않으려 하면서도 미국의 첨단무기를 한반도에 들여놓고, 자체 무장을 강화하는 등 미국과의 군사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튀르키예 국가의 뒤틀린 우선순위가 인도적 재앙을 낳았다

1. 2월 6일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덮친 대지진이 낳은 모든 이재민에게 연대를 표한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인도적 재앙이다. 사망자 수는 이미 2만 2000명을 넘겼는데, 보험회사들은 사망자가 많으면 2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한다. 하지만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다. 오래전부터 지진이 끊이지 않았던 이 지역에서 지진은 필연적이었다. 그러나 사망자 수가 이토록 많은 것은 인간의 행위와 무대책이 빚은 결과이고, 이는 착취에 기초해 자본의 경쟁적 축적으로 돌아가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비롯한다.

2. 어떤 행위가 이런 재앙을 낳았는가? 신자유주의적 이슬람주의 정당인 정의개발당(AKP)이 주도하는 레지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정부(현재 파시스트 정당인 민족주의행동당(MHP)과 연합하고 있다)는 튀르키예에서 20년 넘게 집권하고 있다. 에르도안이 자랑하는 경제 성장은 건설 부문 호황에 따른 것이었고, 이 호황은 정의개발당을 후원하는 자본가들의 부를 늘려 줬다. 에르도안 정부의 장관들조차 인정했듯이, 건설 호황 동안 건축 규제가 체계적으로 무시됐다. 1999년 귤쥐크 지진 당시 약 2만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똑같이 진도가 7.4였던 2022년 일본 후쿠시마 지진 때는 예방 조치 덕에 사망자가 세 명에 불과했다.

이들은 무슨 일을 방기했는가? 1999년 귤쥐크와 뒤즈제 지진 이후 지진 특별세가 도입돼 370억 달러나 걷혔다. 그러나 한 전직 장관에 따르면 그 돈은 내진 설계 건물을 짓는 데 쓰인 것이 아니라 "보건, 도로, 터널, 교량"에 쓰였다. 국제사회주의경향 소속 튀르키예 혁명적사회주의노동자당(DSIP)은 이것이 살인 행위와 다름없다고 규탄한다.

3. 이런 범죄적인 태만은 튀르키예 정부의 재난 대응으로 더한층 심각한 문제로 이어졌다. 튀르키예 정부는 국가의 억압적 권력을 더 강화하려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늑장 구호와 구조로 사람들이 잔해에 깔려 질식사하도록 내버려 뒀다. 에르도안은 "징징



이 인재(人災)의 뿌리는 자본주의 체제에 있다 잔해 속에서 가재도구를 찾는 튀르키예 이재민들

대는 사람들"과 "도둑질하는 사람들"을 비난했고, "허위 사실 유포"를 집중 단속했다. 아디아만주(州)의 한 외과의사는 <파이낸셜 타임스>에 "국가가 없다"고 한탄했다. 그러나 진실은 튀르키예 국가에게 자기만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재앙이 벌어질 조건을 조성한 정치인·건설업자·관료, 이 세 집단을 보호하는 것도 그중 하나다. 정의개발당-민족주의행동당 연정은 자신들이 저지르고 방기한 일들을 만회하려 하기는커녕 이재민들을 비난하느라 여념이 없다.

4. 지진은 튀르키예 북동부 해안 도시 트라브존에서 팔레스타인에 이르는 넓은 지역을 강타했다. 지진 피해는 여러 나라에 걸쳐 발생했을 뿐 아니라, 안 그래도 전쟁으로 고통받던 곳에 더한층의 고통을 줬다. 그곳은 시리아 내전과 역내 아류제국주의 쟁투, 쿠르드인을 상대로 한 튀르키예 국가의 전쟁, 미국과 러시아 간의 제국주의적 개입이 벌어진 곳이다. 지진은 특히 시리아인들에게 큰 타격을 줬는데, 가뜰이나 시리아인들의 삶은 오랫동안 제국주의적 개입과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의 잔혹 행위로 파괴

돼, 엄청난 수의 난민이 시리아 곳곳과 이웃 나라들로 흩어져 있었다.

5. 이 위기는 피해 국가들이 가진 자원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다. 하지만 현재 서방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우선순위는 세 가지다. 금리와 실업률을 올리고 임금을 깎아 인플레이션 위기의 대가를 자국 노동계급이 치르게 하고,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무기를 지원해 경쟁자 러시아를 꺾고, 이주민·난민의 입국을 가로막는 것이다. 최근 유럽연합 정상회의는 지진 피해에 '악어의 눈물'을 흘리면서도 '요새화한 유럽'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유럽연합 정상회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에는 5억 유로를 추가로 쓰기로 했지만, 시리아와 튀르키예를 위한 "인도

적 긴급 지원금"으로는 650만 유로를 쓰기로 했다.

6.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진 피해 지역 안팎의 평범한 사람들은 스스로 피해 지역을 위한 구호를 조직해, 갈 길을 보여 줬다. 이들의 연대는, 예컨대 튀르키예의 "적성국"을 자처하는 아르메니아나 그리스의 평범한 사람들이 보낸 지원으로 빛을 발했다.

7. 우리는 각국에 다음을 요구한다.

- 이재민을 도울 자금·식료품·의약품·구조팀을 피해 지역에 서둘러 보내라.

- 시리아 제재를 6개월 동안만이 아니라 완전히 중단하라. 누가 도움을 받을지 차별하지 말라.

- 이 지역에 있거나 이 지역에서 온 난민·이주민을 충분히 지원하라. 국경을 개방하라!

- 허술한 건물을 짓고 예견된 지진에 대비하지 않은 데에 책임이 있는 정치인·건설업자·관료들을 형사 기소하라.

- 군비 지출을 줄여서 그 재원을 인간의 진정한 필요를 충족하는 데 써라.

8. 기후 변화가 이 재난을 직접적으로 촉발하는 구실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현 상황은 기후 재앙에 대한 지배자들의 대응이 어떤 모습일지를 훔쳐 보여 준다. 그것은 무대응과 탄압, 그리고 이재민 탓하기일 것이다. 우선순위가 뒤틀리고 부패하고 냉혹한 지배계급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체제하의 세계를 뒤엎을 사회주의 혁명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2023년 2월 12일

국제사회주의경향

출처 'IST STATEMENT ON EARTHQUAKES IN TURKEY AND SYRIA', (2023. 2. 12)

